



주간 제 8049 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6년 3월 23일 월요일 (음력 2월 5일)

민주, 통합시장 경선 5파전...이제부터 '진검승부'

예비경선서 정준호 탈락...4월 3~5일 본경선 권리당원 50%·여론조사 50% '국민참여경선' 결선 투표 가능성 높아...후보간 합종연횡 변수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이 5파전으로 압축되면서 초대 시장 자리를 둘러싼 후보 간 '진검승부'가 본격화됐다. 국립의대 설립과 주청사 입지 등 핵심 현안을 전면에 내건 경쟁이 시작되면서 후보별 비전과 실행력을 가르는 검증이 동시에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예비경선 탈락 후보 지지층의 표심을 비롯해 권역별 민심과 당심의 흐름, 조직력과 인지도, 정책배심원의 실효성 등은 이번 경선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2·8면**

2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지난 19~20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경선(권리당원 100% 투표) 결과 김영록·김기정·주철현·신정훈·민형배(이상 기호순) 예비후보 등 5명이 본경선에 진출했고 정준호 후보는 탈락했다. 당초 8명이던 경선 구도는 경선 물에 반발한 4선 이계호 의원의 불참 선언과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의 중도 사퇴로 6명으로 줄었다. 예비경선을 거치며 최종 5명으로 압축됐다.

본경선은 4월 3일부터 5일까지 권리당원 50%와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1~2위 간 결선 맞대결이 이어진다. 권리당원 규모는 광주 약 11만 명, 전남 약 20만 명으로 전남이 두 배 가까이 많아 지역별 표심 구조 역시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투표는 온라인과 자동응답(ARS) 인바운드·아웃바운드 방식이 병행되며, 권리당원은 사흘간 온라인과 ARS 투표에 참여하고 안심번호 선거인단은 1~2일차 ARS 발신 방식으로 조사된다.

이번 본경선에는 정책배심원과 국민참여경선이 도입됐다. 당초 검토됐던 시민공천배심원제는 당내 '불안정성' 우려로 배제되면서 정책배심원단은 투표권 없이 심층 토론과 평가 역할에 집중하게 됐다. 정책배심원 심층토론회는 전남 서부권(27일), 동부권(28일), 광주권(29일)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배심원단 평가가 득표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 만큼 여론 형성과 후보 이미지에 미치는 간접 효과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 승부는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



사를 합산하는 구조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본경선에서는 예비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들이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 전남 의대 소재지 논란을 비롯해 주청사 문제, 동부권 소외론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특히 국립 의대 문제는 지역 갈등으로 확산되며 경선 초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나머지 쟁점들을 둘러싸고도 상호 비방과 강도 높은 검증이 이어졌으며 무능론 공세와 맞장 토론 제한, 공약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신경전도 지속됐다.

5인 체제 본경선은 다자 구도 속 결선투표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단일화와 지지층 결집을 위한 공세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열된 비방전이 핵심 현안에 대한 유권자 판단을 흐리고 정치혐오를 자극해 투표를 저하와 민심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가운데 후보 간 전략적 연대, 이른바 합종연횡은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예비경선을 통해 당심의 윤곽이 일정 부분 드러난 만큼 후보 간 이해관계에 따라 연대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해석이다. 경선 초반부터 이어진 후보 간 러브콜이 정치 적성상과 이력 등을 매개로 실제 연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선 불참자와 예비경선 탈락자의 표심 향배 역시 끝까지 주목할 변수다. 권역별 민심의 흐름과 함께 정책배심원제가 단순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검증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도 시합대에 올랐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본경선으로 갈수록 후보 간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탈락 후보와의 연대 여부나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중동 사태 여파...광주 '쓰레기봉투 대란' 비상

동구 재고 1개월분...남·북·광산도 2~3개월 수준 원료 확보해야 불안 해소...가격 인상·사재기 우려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원료 수입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생활 필수품인 종량제봉투 공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광주 동구에서는 특정 규격 재고가 한 달 정도에 불과해, 원료 확보가 지연될 경우 수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종량제봉투의 핵심 원료인 폴리에틸렌(PE)은 원유에서 추출한 나프타를 기반으로 생산된다. 그러나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나프타 수입 불안이 심화됐고, 이에 따라 원료 가격도 급등하는 추세다.

업계 조사 결과 이달 들어 폴리에틸렌 공급가는 약 20만원 상승했으며, 일부 업체는 다음 달 추가로 40만~80만원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원

가 부담이 커지면서 생산업체와 지자체 모두 대응에 비상이 걸렸다.

광주 지역 재고 상황은 자치구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던 전방적으로 여유롭지 않다. 특히 동구는 일부 규격에서 재고 부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일반용 20L과 75L는 한 달 남짓, 30L는 사실상 한 달 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사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단기간 내 재고가 바닥날 수 있는 상황이다.

남구와 북구, 광산구도 상황이 녹록치 않다. 남구는 일부 규격이 약 2개월분에 그치고, 북구는 규격별 편차 속에서도 수요가 많은 제품은 2~3개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광산구 역시 전체 재고

를 감안할 때 약 2개월 정도 사용 가능한 물량만 확보된 상태다. 반면 서구는 4~5개월분 재고를 비축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원료 추가 확보 여부가 향후 수입 상황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공급이 지속되지 않을 경우 중장기적인 불안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가격 인상 압박도 커지고 있다. 현재는 기존 계약 단가가 유지되고 있으나, 원료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납품 단가 조정은 사실상 불가피하다. 이는 종량제봉투 판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지자체도 대응에 나섰다. 동구는 납품 지연 해소를 위해 신규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추진 중이며, 조달청에 단가 조정이나 특례 적용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수입 불안 장기화에 대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사재기와 부당 가격 인상 등 불공정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임영진 기자 looks@**

검찰청 대신 공소청·중수청 신설된다

기소전담·중대범죄수사 전담... 10월 검찰청 폐지

새 형사사법기구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와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월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다. 중수청법은 지난 21일, 공소청법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 주도하에 결선투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파괴", "최악의 계약"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지만, 민주당은 진보 성향의 군소정당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토론 시작 24시간 뒤 투표로 종결하고 법안을 차례로 처리했다.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주요 수사 대상은 △부패 △경계 △범죄 △사마 △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다. 여기에 이른바 법외범죄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

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중수청 수사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1~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를 갖는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도 신설된다.

공소청은 중앙청과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감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감사의 파면을 가능케 했다.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면서 검찰 개혁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당내에서는 형소법 개정과 관련해 공소청 감사에 보완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since 1978

제46회 The 46th jindo Miracle Sea Road Festival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2026. 4. 17. 금 - 4. 20. 월
전남 진도군 고군면 신비의바닷길 74

모도 MODO

보배섬 진도

2026 보배섬 유채꽃축제

축제 기간 26.4.9.(목) ~ 4. 12.(일)
나들이기간 26.4.13.(월) ~ 4.20.(월)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일원

| 주최 | Jindo | | 주관 | 진도군 축제추진위원회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 전라남도 | 한국관광공사 | 협찬 | D'LIVE | | 주최 | 주관 | Jindo | | 후원 | (주)메밀꽃 유채향